

2

국토연구원

평가등급 현황

[평가등급 기준]

득점률	평가등급
100%	S
90% 이상 ~ 100% 미만	A
80% 이상 ~ 90% 미만	B
70% 이상 ~ 80% 미만	C
60% 이상 ~ 70% 미만	D
50% 이상 ~ 60% 미만	E
50% 미만	F

[평가등급 현황]

1 연구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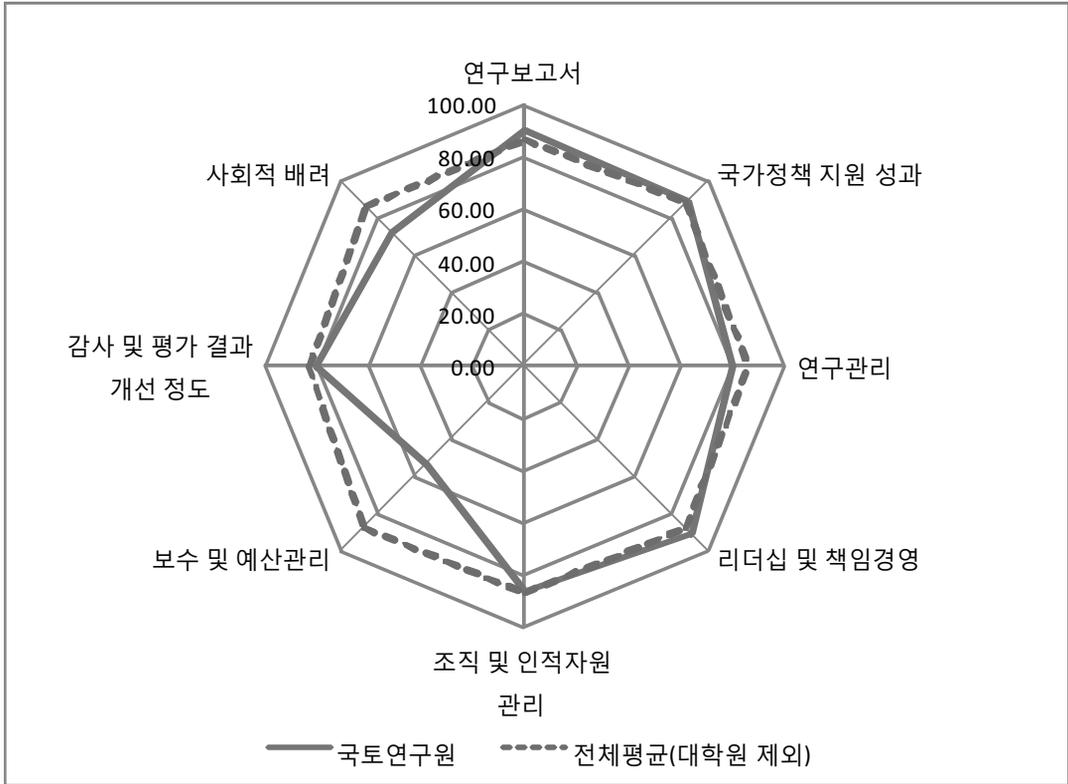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요소	등급
1-1. 연구보고서	1-1-1. 연구보고서의 우수성	<input type="checkbox"/> 기본/수시/일반/수탁과제 등의 연구보고서 우수성	B
	1-1-2. 연구보고서의 연구윤리 준수 정도	<input type="checkbox"/>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위반 의심 여부	S
1-2. 국가정책 지원 성과	1-2-1. 연구기관의 정부과제 지원 성과	<input type="checkbox"/> 국정과제 수행 연구·사업 실적과 성과	B
		<input type="checkbox"/> 정부 현안과제에 대한 대응 정도	B
		<input type="checkbox"/> 정책연구네트워크 운영 실적과 성과	B
	1-2-2. 연구과제의 정책수립 지원 성과	<input type="checkbox"/> 연구과제의 정책수립 기여도 <input type="checkbox"/> 선도과제의 정책수립 기여도	A
	1-2-3. 정책 집행사업 지원 성과	<input type="checkbox"/> 정책 집행사업 기여도	A
	1-2-4.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input type="checkbox"/> 정부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보통
		<input type="checkbox"/> 산·학·연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매우 우수
1-3. 연구 관리	1-3-1. 연구과제 선정·수행 및 협동연구 추진의 적정성	<input type="checkbox"/> 연구과제 선정·수행의 적정성	C
		<input type="checkbox"/> 산·학·연 협동연구 추진체계 및 실적의 우수성	B
	1-3-2. 성과확산 체계의 적정성	<input type="checkbox"/> 연구성과 관리·확산체계 및 실적 <input type="checkbox"/> 정부 3.0 추진 성과 정도	C B
	1-3-3. 연구역량의 국제화 정도	<input type="checkbox"/> 연구역량의 국제화 정도와 성과	B

2 경영 분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요소	등급
2-1. 리더십 및 책임경영	2-1-1. 리더십	<input type="checkbox"/> 기관의 현안문제 타개와 대내·외적 소통 능력	B
		<input type="checkbox"/> 윤리경영	D
	2-1-2. 책임경영	<input type="checkbox"/>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적정성 및 성과목표 달성도	B
		<input type="checkbox"/> 책임경영 이행 정도	S
	2-1-3. 자율지표	<input type="checkbox"/> 기관장 중점 추진과제1	A
		<input type="checkbox"/> 기관장 중점 추진과제2	A
2-2. 조직 및 인적 자원 관리	2-2-1.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의 효율성	<input type="checkbox"/> 효율적 조직운영 및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과 성과	B
		<input type="checkbox"/> 조직 구성원의 역량 및 인사관리 적정성	B
		<input type="checkbox"/> 연구기관 보안관리의 적정성	B
	2-2-2. 노사관계 선진화	<input type="checkbox"/> 노사관계 선진화 정도	C
	2-2-3. 복리후생 운용의 합리성	<input type="checkbox"/>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실적 정도	S
2-3. 보수 및 예산관리	2-3-1. 예산운용의 적정성	<input type="checkbox"/> 예산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과 적정성	B
	2-3-2. 보수체계의 적정성	<input type="checkbox"/> 총인건비 관리의 적정성	F
		<input type="checkbox"/> 결산잉여금 처분 및 퇴직급여충당금 편성·집행의 적정성	S
		<input type="checkbox"/> 성과연봉제 운영의 적정성	F
		<input type="checkbox"/> 임금피크제 정착 노력과 운영효과	S
2-4. 감사 및 평가 결과 개선 정도	2-4-1. 내·외부 감사결과 및 연구기관 평가결과 개선 정도	<input type="checkbox"/> 내·외부 감사결과에 대한 개선 정도	B
		<input type="checkbox"/> 연구기관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 정도	B
2-5. 사회적 배려	2-5-1. 정부권장정책 이행 정도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정도	D
		<input type="checkbox"/> 청년인턴 채용 이행 정도	B
		<input type="checkbox"/>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률 준수 정도	E
		<input type="checkbox"/> 휴가장려 및 일·가정 양립지원정책 운영의 적정성	S
		<input type="checkbox"/> 비정규직 차별 해소 및 전환 정도	D

총 평

□ 평가항목별 평균 대비 기관 득점 수준



□ 종합의견

[연구분야]

- 각 연구주제의 선정이 현재의 시장상황을 잘 반영하여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졌고 정책활용 방안 제시로의 연계성이 뛰어나지만, 정보체계는 운영이 중요하고 지속적 업데이트가 필요하며, 가공된 정보만 제공한다면 이용자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유인이 적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운영에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함.
- 기관의 설립목적 및 연구사업 목표와의 부합성을 고려하고 외부수요와 내부역량의 조화를 통해서 15개 국정과제를 적절하게 선정하여 전반적으로 잘 수행하고 있음.
- 국토 관련 현안과제에 대한 과제발굴과 최신 이론 및 정보, 사례 및 실증분석 등에 의한

연구결과 도출 및 정책대안의 제시로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국토이용 및 관리방안을 제시함.

- 연구분야별 전략과제 기획을 강화하여 국정과제 연계성 및 정책수요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였으나 연구주제 발굴 및 연구과제 선정을 위한 위원회는 외부위원의 참여가 보이지 않으므로 연구과제 발굴 및 선정을 위한 각종 위원회의 외부위원 참여방안 모색이 필요함.
- 선정된 수시과제를 정책적 과제, 전략적 과제, 기초적 과제, 협동적 과제 등으로 유형화하고 이에 따라 과제관리를 적합하게 함. 하지만 수시과제 심의위원회는 내부위원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수시과제의 연구수행 및 평가 등에 있어서 해당 정부부처 담당자의 참여가 미비함. 향후 연구성과 관리체계를 기본연구/일반연구와 수시연구에 대해 차별화하고, 관리체계를 연구수행 관리, 연구수행 평가, 연구성과 관리 등으로 범주화한 후 각각의 특성에 맞는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기본연구, 일반연구, 수시연구 등 과제유형별 협동연구 수행비율은 고르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연구회 협동연구사업 운영규정 외에도 기관 본연의 취지에 맞는 협동연구를 발굴, 활성화하기 위한 내부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전사적 지식자산 서비스 고도화 및 국제3대 오픈 리포지터리(Open Repository) 사이트 등록을 통한 연구성과 확산실적과 환류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음.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이나 홍보수단별 타겟그룹을 보다 유형화하고 해외언론이나 매체를 활용한 해외홍보 제고와 논문게재를 높이기 위한 연구원 차원의 대책 마련이 요구됨. 정부3.0을 구현하기 위해 우수기관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정보공개, 소통 및 일하는 방식과 함께 DB를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 방안 마련이 필요함.
- 국제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4대 실천전략 및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였고 글로벌 협력개발 센터를 통해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국제협력사업 고도화를 위한 후속사업 연계모형을 개발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연도별 성과지표를 보다 구체화하고 인력교류를 일본 이외로 다변화하는 노력이 요구됨. 실질적인 공동연구가 가능하도록 해외전문가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경영분야]

- 기관장은 기관발전을 위한 현안문제 타개를 위해 연구원 설립 목적과 기능·역할, 경영여건을 분석하고, 내·외부 자문 및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하여 체계적으로 현안과제를 도출하였음.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기관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기관장의 노력이 적극적이며, 연구윤리 준수를 위한 내·외부 입체적인 관리 및 연구윤리 검토를 위한 사전 사후의 체계적인 점검체계를 갖추고 있음. 다만, 연구자들의 개인적인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음.

- 기관장은 구성원이 참여하는 보도자료 콘테스트를 시행하여 구성원들의 사회이슈 대응 능력을 강화하였고, 아젠다 위주의 센터를 구성하여 센터중심의 과제수행 및 센터 간 협력활동, 센터별 정책실무협의회 개최를 통하여 연구수행의 전문성·융복합성을 강화하였음. 연구수행에 있어서 시민참여 연구를 통하여 지역 상황에 맞는 현안에 대한 연구를 시도하였음. 연구교류협약 체결기관과의 교류 성과에 기초하여 수요 맞춤형사업 중심으로 협력운영계획을 전략적으로 운영하였음. 국제공동연구를 선·후진국 대상으로 다양하게 실시하였고, 국제세미나, 공동워크숍 등을 통한 연구결과의 국제적 확산을 위해 노력한 점이 우수함.
- ‘국토정책 연구 국제화 선도연구기관’ 비전과 ‘국제교류·개발협력 활성화를 통한 연구역량 국제화 제고’의 연구역량 국제화 전략 수립으로, 국토개발 국제 공동연구 및 글로벌 개발협력을 위한 목표와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였음. 또한, ‘국가 스마트도시 정책 지원 기능 강화’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스마트시티 정책 지원, 국내·외 교류 및 협력,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스마트 도시 지원 강화 등 다양한 전략을 활용하여 성실히 과제를 수행하였음. 향후, 한국 스마트 도시의 강점과 도시별 특성을 감안한 구체성이 요구됨.
- 연구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조직 활성화 및 맞춤형 융복합 TF를 운영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 내고, KRIHS 스타연구원 도입 및 저성과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시행 등 체계적인 인력관리 제도 운영을 통해 조직역량을 강화함. 인재상 및 핵심역량을 설정하고 경력단계별 맞춤형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수립하여 체계적인 교육훈련 시스템 구축에 노력함.
- 전년 대비 원장-노조 대표 간 의사소통 횟수가 확대되었고, 그간 난항을 겪던 노사협의회 구성이 완결되었음. 또한 전년도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수평적 소통채널을 보다 다양화하였음. 퇴직예정자에 대한 금품 과다지급에 해당될 수 있다는 국무조정실에서 지적 사항을 수용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함. 다만 노조의 3원화(복수노조)로 인해 노조 상호 간 갈등 발현의 소지가 있고, 노무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이 타기관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며, 고충처리시스템의 체계적 완결성이 부족하므로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함.
- 복리후생 관련 체크리스트 위반사항이 존재하지 않고 정기감사를 통해 복리후생 관련 부당 지출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나, 타기관의 범례를 참고하여 보다 조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운영할 필요가 있음.
- 2016년도 정부제안과제와 기초연구과제 및 연구개발적립금 사업은 기준에 부합되게 편성하였으며, 예산편성과 집행에서도 투명성을 유지하고 과제별 예산 모니터링시스템도 잘 갖춤. 단지 중점연구과제의 집행률을 제고할 필요와 수시연구과제 비중을 기준에 부합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음.

- 결산잉여분 처분 및 퇴직급여충당금 편성·집행이 적정함. 성과연봉이 총연봉 대비 적정한 기준을 유지하며, 결산잉여금에 의한 능률성과급기준도 적정하게 설계됨. 또한 임금피크제 정착과 운영에 있어 정부권고안을 준수함. 하지만 인건비 인상률 기준 준수 노력이 필요하며, 기본연봉의 누적식 전환과 차등지급률 기준 도입이 요구됨.
- 국무조정실의 지적사항인 평가등급 부여 및 연봉제 이행의 부적정성에 대하여 노동조합과의 적극적 협의를 통하여 조속히 이행할 필요가 있음. 자체 감사역량의 경우, 감사실 전담 인력을 2명을 배치하고 있으며, 일반경비 집행 및 법인카드 사용 안내(보고서 형태) 자료를 작성하여 구성원에게 교육한 노력이 인정됨. 그러나 비상임감사의 유고 상황을 적극적으로 예견하고 후속조치를 취하려는 노력을 통하여 비상임감사 활성화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활동이 이루어져야 함.
- 휴가장려 및 일·가정 양립지원정책은 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고 활용 실적 또한 우수한 편임.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고용 실적은 정부권장기준에 다소 미달하나 제한경쟁 및 특별채용 등을 통한 구인활동은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음.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해소 및 처우개선에 대한 지침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과 정규직간 임금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내실있는 노력이 필요함.

I

연구 분야

1-1

연구보고서

1-1-1. 연구보고서의 우수성

□ 기본/수시/일반/수탁과제 등의 연구보고서 우수성

〈장 점〉

- 각 연구주체의 선정이 현재의 시장상황을 잘 반영하여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졌고 정책활용 방안 제시로의 연계성이 뛰어나.
- 연구주체에 맞는 통계분석이 적절하게 이루어졌으며, 모형의 효율성 검증, 분석적 계층화 과정을 활용한 지표개발, 시스템의 설계 및 운영방향의 제시가 적절하게 이루어졌음.
- 사회적 배제와 생활만족도와와의 관계를 계량모형으로 분석함으로써 삶의 필수적 요소로서의 교통의 의미를 부각하였고 실제 교통사업 평가 시 적용이 가능한 교통측면의 사회통합지수 개발, 교통정책 의사결정 시 활용할 수 있는 교통포용지수를 개발하였음.
-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핵심정책과제를 제시하였으며, 향후 정책실행을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 구체적인 정책방안 제시 등 사회적으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분야에서 정책활용 가능성이 높음.

〈단 점〉

- 기존 선행연구나 다른 연구들과 어떠한 차별성이 있는지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여 차별성이 불분명함.
- 빅데이터를 사용한 연구들에서 다양한 연구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이 다소 부족하였으며, 일부 연구에서는 데이터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절차가 충분하지 못하였음.
- 해외사례 분석을 특정국가가 아닌 우리나라의 여건과 비슷한 국가를 추가하여 분석 제시하거나, 향후 여건변화를 고려한 현 정책의 개선방향 등의 제시가 다소 부족함.

- 새롭게 제시한 분석기법들이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용성 측면에서는 여전히 한계 및 제약을 보여주고 있고 충분한 점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개선 및 건의사항〉

- 일부 연구에서 연구범위가 지나치게 방대하고 객관적인 성과지표 등의 제시가 한계가 있으므로, 법·제도적 이행을 위해 구체적인 후속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정보체계는 구축보다는 운영이 더 중요하고 지속적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유용성이 저하되며, 가공된 정보만 제공한다면 이용자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유인이 적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운영에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함.
- 미래예측은 사회환경의 급변 등에 의해 변경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정기간을 갖고 후속연구를 정기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
- 특정 연구에서 초국가 산업벨트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단기적인 유인책 마련이 필요함.

1-2 국가정책 지원 성과

1-2-1. 연구기관의 정부과제 지원 성과

□ 국정과제 수행 연구·사업 실적과 성과

〈장 점〉

- 기관의 설립목적 및 연구사업 목표와의 부합성을 고려하고 외부수요와 내부역량의 조화를 통해서 15개 국정과제를 적절하게 선정하여 전반적으로 잘 수행하고 있음.
-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통해 향후 국가도로 종합계획 수립, 향후 5년간 도로계획 투자규모, 여건변화 전망, 미래도로 정책방향 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큼.
-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부합한 국정과제를 외부수요와 내부역량의 조화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잘 수행하고 있음.

〈단 점〉

- 과제의 발굴 및 선정에서 국정과제 수행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절차나 조직이 명확하지 않음.

- 기본연구와 일반연구 모두가 국정과제로 수행되어 국정과제의 비율이 과도하게 높음.

〈개선 및 건의사항〉

- 국정과제와의 부합성을 연구기획 단계에서 평가를 하는데, 국정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더라도 기관의 고유설립 목적에 부합하고 전문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초연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다년과제인 경우 2016년에 수행한 연구가 무엇이고 어떻게 차별성이 있는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음.
- 미래에 대한 방향 제시와 더불어 기존의 문제점을 보다 심도 깊게 논의하는 것도 필요함.

□ 정부 현안과제에 대한 대응 정도

〈장 점〉

- 인구감소시대 도래, 지방중소도시 지역문제 등의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함.
- 스마트시티 고도화, 관련 산업 육성 및 제도 도입 등과 관련한 현안에 적절하게 대응함.
- 공간정보와 사물인터넷을 결합하고자 하는 시도와 공간정보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해서 급속히 발전하는 과학기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노력함.
- 정부의 현안요청에 법령 제·개정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함.

〈단 점〉

- 정부 현안과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정도에서 선제성에 대한 근거가 미약함.
- 최신 사회적 이슈에 부응한 정부현안과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라기보다는 국정과제와 연계된 기존 연구들을 현안과제화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5대 국정과제의 하나인 '국민안전'과 관련한 중요한 사회 이슈, 예컨대 4대강 사업의 수질 악화나 지진 관련한 선제적 대응 정도가 부족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연구원이 과거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를 증거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융합의 시대에서 국토교통부 외 다양한 부처와의 협력 증대가 필요함.

□ 정책연구네트워크 운영 실적과 성과

<장 점>

- 유관부처인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및 국회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서 국정과제수행을 위한 외부수요 파악을 하고자 노력함.
- 유관 부처와의 협력 142건, 정책연구네트워크 운영 관련 82건으로 활발한 협력과 운영이 되고 있음.
- 해외진출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위한 해외 진출 포럼을 구축하고 있음.

<단 점>

- 협력대상 기관이 국토교통부에 편중되어 있음.
- 융합 연구 협력을 위한 연-연, 학-연 네트워크 실적이 미약
- 네트워크를 구축함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실제적인 성과로의 연결이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협력대상기관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으며, 타 유관 연구기관과의 협업 등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이끄는 것이 필요함.
- 사업성 증대를 위한 산학협력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융합연구 협력을 위한 연-연, 학-연 네트워크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유관부처와의 협력, 정책연구네트워크 실적 및 성과 관련 전년 대비 변화를 보여줄 필요가 있음.

1-2-2. 연구과제의 정책수립 지원 성과

□ 연구과제의 정책수립 기여도

<장 점>

- 대부분의 연구과제가 최근 국가·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를 다루었고, 전문가 자문회의, 세미나 및 워크숍, 관련부처와의 협업 등을 통하여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정책화 과정에 기여도가 높음.
- ‘주택시장 환경 및 구조변화에 대응한 주택금융지원체계 정립방안’은 외국 학자와 연계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으로 구성된 주택금융협회에 안건 발표 등 다양한 정책화 노력을

경주한 점이 우수하다고 평가됨.

- ‘기성시가지 재생을 위한 효율적 도시관리제도 개선방안’은 관련된 기성시가지 재생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점과, 도시재생법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개정 등 정책대안들이 실제로 입법과 정책에 반영되어 증가하는 기성시가지의 도시재생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였다는 점 등이 우수하다고 평가됨.

〈단 점〉

- 일부 주제, 예컨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도시계획시설 제도개선 방안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책대안은 사회복지시설 등 일부 시설에 집중해서 제시되고 있는데, 도시계획시설 관련 제도가 지니고 있는 종합적인 문제점 분석을 통해 연구대상 및 범위선정의 체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공간정보 융·복합 활용 활성화를 위한 공간정보 관련 제도정비 방안’에서는 시의 적절한 주제를 연구하였으나, 의견수렴절차나 의제형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지 않아 국민적 공감대나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지 못한 한계가 있으며, 이로 인하여 대안의 정책화 실적 또한 계획 대비 미흡한 수준으로 나타남.
- 다수의 연구과제가 가진 연구결과의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파급효과가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지 않고 피상적인 설명에 그침.

〈개선 및 건의사항〉

- 정책대안의 경우 다각적인 접근을 통하여 가능한 한 유사한 선행연구에서 제시하지 않은 참신한 대안발굴이 필요해 보이며, 또한 대안의 정책화 과정에서 공청회, 정책토론회, 세미나 등 다양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음.
- 연구성과의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파급효과를 형식적으로 막연하게 기술하기 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할 필요가 있음.
- 연구자문 및 외부전문가 그룹의 폭을 확대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선도과제의 정책수립 기여도

〈장 점〉

- 대체적으로 최근 국가·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으며 선도성이 강한 주제를 다루었고, 선도과제들에서 제시한 대안들이 실제로 관련 법령 개정 등 다수 반영됨으로써 추상적인 대안이 아닌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제시가 인정됨.
- ‘융합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역간 교통수요 추정 연구’는 현재의 존(zone) 단위 회귀모형방식의 교통수요추정방법이 지나는 교통수요발생의 원인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선도성이 있으며,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교통수요추정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수요추정의 정확도 향상 및 SOC 투자효율화 등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수한 연구로 평가됨.

- ‘부동산시장 여건 변화에 대응한 주거지재생 효과분석 시스템 구축’은 증가하는 주거지재생사업의 효과분석을 통해 사업성, 평균분담금, 재정착률, 부동산시장 과급효과 등의 사전적 분석을 가능케 한다는 측면에서 우수함. 특히 대구광역시를 시범지역으로 모형 및 시뮬레이션 수행을 통한 시스템 검증 작업을 계획함으로써 정책대안의 현실성 제고 노력도 우수하다고 평가됨.
- ‘교통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활동기반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 및 적용방안’은 사회 변화에 따른 교통수요 예측으로 효율적인 중장기 교통투자계획 수립지원이 예상되며, 교통정책의 미시적 효과 평가로 계층별/지역별 맞춤형 교통정책 수립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한국형 활동기반 교통시뮬레이션은 도로, 대중교통 등 인프라 투자를 통한 서비스개선에 우수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단 점〉

- 전반적으로 선도과제로서의 가치는 충분하나 관련된 새로운 이론이나 정책 개발을 위한 관련부처 간 업무협약 및 세미나 및 공청회 개최, 정부부처/국회/각종 위원회 등과의 활발한 여론 확산 및 정책반영·지원 실적은 미흡함.
- ‘융합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역간 교통수요 추정 연구’는 빅데이터의 원천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부족하고 빅데이터 확충에 대한 대안 제시가 부족함. 시범지역 선정을 통한 시뮬레이션 및 연구결과의 모니터링 및 피드백의 검증노력을 위한 장치도 부족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새로운 주제발굴과 정책대안 제시를 위한 다각적 접근이 필요하고 연구성과물을 가급적 국제학술지에 게재하여 연구성과를 국제적으로 공유하는 것도 필요함.
- ‘융합 빅데이터를 활용한 교통수요 추정 연구’와 ‘교통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활동기반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 및 적용방안’은 상호 유사성이 있으며 연구결과의 시너지효과 창출을 위해 융합연구가 필요함.
- 대형과제의 위상에 걸맞게 연구성과의 파급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의 적극적인 모색이 요구됨.

1-2-3. 정책 집행사업 지원 성과

□ 정책 집행사업 기여도

〈장 점〉

- 평가 대상인 3개 사업 모두 사업계획과 추진체계는 전반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연구, 조사, 대외협력 등 3개 분야로 조직을 구성하여 연구, 현장적응 및 연구결과의 정책화과정 등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별 마일리지제도 도입으로 업무량 배분의 객관성을 제고하고 있는 점이 우수함. 특히 격주 1회 이상의 성과점검회의를 실시하고 있고, 사업 특성별 고객만족도 조사 및 사후 평가의견을 수렴하는 시스템 구축으로 사업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는 점도 우수함.
- ‘부동산시장연구센터’는 부동산정책 의사결정지원시스템, 지역부동산시장 분석 시스템, 소비심리분석 모형, 거시계량모형, 정비사업 파급효과 모형, 신규주택 수급지도 및 지역부동산시장 상황판 등을 자체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우수함. 거시팀, 미시팀, 심리팀, 시스템팀 등이 협력하는 주별-월별-분기별 등 상시 성과관리체계 운영도 우수함.

〈단 점〉

- ‘도시재생지원센터사업’은 연도별 사업 목적과 주요 사업을 설정하고 있음에도 다소 중복성이 있는 사업실적으로 집중력이 떨어지고 효과가 잘 인식되기 어려움.
- ‘부동산시장연구센터사업’은 일반인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홍보 강화가 필요하며, 일반인 의견 수렴 확대 및 이를 통한 사업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특히 부동산시장 위기가능성 진단 등 시장을 선도하는 정책연구과제의 발굴 및 추진으로 연구성과의 사회적 기여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전반적으로 연구, 조사 및 공론화 사업에 적절한 예산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보다 광범위한 전문가와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사업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도시재생지원센터사업’은 유사한 과제가 반복됨으로써 성과도출 효과가 저감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신규 연구과제의 기획 및 집행이 필요함.
- ‘국가공간정보정책 총괄 및 조정사업’은 다양한 기관으로 분산되어 있는 공간정보사업의 통합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업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운영체계 구축이

필요함. 또한 제공되는 정보가 지역별로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세부지표 개발 노력이 필요함.

- 전반적으로 양적 성과는 우수하나 연구사업의 질적인 면이 저하될 위험을 예방하는 보완책이 필요하고, 연구원의 일상적인 연구 활동과 과제의 면에서나 활동의 면에서나 중복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대책이 필요함.
- 사업집행 환류를 통한 입법화,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반영, 부처 및 각종 위원회 안전 반영, 정부 및 국회 주관 정책토론회 개최 등의 구체적 실적 제고방안이 필요하며, 보다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전문가와의 협업 및 의견수렴 시스템 구축을 통해 사업 계획 및 집행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체계구성이 필요함.

1-2-4.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정부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정부고객의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전년도 대비 점수가 하락함. 수탁연구 점수가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하였고, 기본연구, 위탁/공동연구, 정보제공 점수는 하락함. 상세 업무별로는 위탁/공동연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육성 및 촉진, 수탁연구, 기본연구, 정보제공 순임.
- 정부고객의 전체평균(국무총리 산하 26개 조사기관) 대비 만족도 분석결과, 전체평균 대비 낮은 수준임. 수탁연구, 육성 및 촉진이 전체평균 대비 높으며, 기본연구, 위탁/공동연구, 정보제공이 전체평균 대비 낮게 나타남.
- 구성모형별 KCSI-EHS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사회적 품질’ 차원의 점수는 전체평균 보다 높으나, ‘전반적 만족’ 차원이 전체평균 대비 낮게 나타남.
- 세부항목별 분석 결과, 기본연구의 경우 ‘고객문의 및 협의사항에 대해 친절하게 응대’ 항목의 점수가 높은 반면, ‘연구결과물의 정책적, 학문적 활용 가치’ 항목의 점수가 낮게 나타남. 수탁연구의 경우 ‘고객문의 및 협의사항에 대해 친절하게 응대’ 항목의 점수가 높은 반면, ‘연구결과물의 정책적, 학문적 활용 가치’ 항목의 점수가 낮게 나타남. 위탁연구의 경우, ‘연구과제 수행에 있어 필요한 정보 제공·교류’, ‘사회요구 및 정책수용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연구결과물’ 항목의 점수가 높은 반면, ‘고객의 의견 및 건의사항 반영 위해 노력’ 항목의 점수가 낮게 나타남. 정보제공의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정보 제공’ 항목의 점수가 높은 반면, ‘고객문의 및 건의사항 전달 위한 담당자 접촉용이’ 항목의 점수가 낮게 나타남. 육성 및 촉진의 경우 ‘포럼 및 세미나의 발제자, 토론자를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 항목의 점수가

높은 반면, ‘포럼, 세미나 운영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 항목의 점수가 낮게 나타남.

- 업무유형별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연구과제 수행’에서는 산출하는 결과물에 대한 활용도, 활용가치를 파악하기 위한 체계 마련이 필요함. 연구 수행 초기 단계에 고객의 니즈(Needs)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최종 결과물이 최초의 고객 니즈를 어느 정도 충족시켰는지 확인하는 단계도 필요함. 또한 정책적 활용가치는 환경 변화에 민감할 수 있으므로 정책적인 환경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정보제공’에서는 고객이 문의하기 위해 담당자와 접촉하기 쉽도록 업무별 담당자 및 연락처가 안내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함. 또 문의를 위한 절차가 충분히 쉽고 간편한지 확인해야 함. 고객의 문의 편의성을 높이고,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업무별 문의 처리 담당자를 지정하는 담당자 지정제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산·학·연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산·학·연 고객의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전년도 대비 점수가 상승함. 수탁연구 점수는 전년 대비 대폭 상승하였고 기본연구, 위탁/공동연구, 육성 및 촉진도 상승함. 정보제공의 점수는 하락함. 상세업무별로는 수탁연구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육성 및 촉진, 기본연구, 위탁/공동연구, 정보제공 순임.
- 산·학·연 고객의 전체평균(국무총리 산하 26개 조사기관) 대비 만족도 분석결과, 전체평균 대비 높은 수준임. 정보제공을 제외한 모든 상세업무의 점수가 전체평균보다 높게 나타남.
- 구성모형별 KCSI-EHS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차원 및 품질요소의 점수가 전체평균 대비 높음. 상세업무 유형에서는 정보제공을 제외한 4개 상세업무에서 대부분의 차원 및 품질요소가 해당업무 전체평균보다 높음. 정보제공의 ‘대응성’ 점수가 전체평균보다 큰 폭으로 낮게 나타남.
- 세부항목별 분석 결과, 기본연구의 경우 ‘전문적인 연구결과물’ 항목의 점수가 높은 반면, ‘연구과제 수행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 항목의 점수가 낮게 나타남. 수탁연구의 경우 ‘고객과 협력 위해 노력’, ‘국가 및 사회에 유익한 연구결과물’ 항목의 점수가 높게 나타남. 위탁연구의 경우 ‘연구과제 수행에 대한 책임감 보유’ 항목의 점수가 높은 반면, ‘연구과제 수행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 항목의 점수가 낮게 나타남. 공동연구의 경우, ‘고객문의 및 협의사항에 대해 친절하게 응대’, ‘사회요구 및 정책수용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연구결과물’ 항목의 점수가 높게 나타난 반면, ‘연구과제 수행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 항목의 점수가 낮게 나타남. 정보제공의 경우, ‘업무/연구에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 항목의 점수가 높은 반면, ‘고객문의 및 건의사항 전

달 위한 담당자 접촉 용이' 항목의 점수가 낮게 나타남. 육성 및 축진의 경우, '업무/연구에 도움이 되는 포럼, 세미나' 항목의 점수가 높은 반면, '포럼, 세미나 운영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 항목의 점수가 낮게 나타남.

- 업무유형별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연구과제 수행'에서는 고객과 원활한 의사소통, 정보 공유를 위해 연구과제 수행 중간 단계에서도 고객의 의견 및 건의사항을 확인하고 필요시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함. 또한 연구결과의 품질 향상을 위해 수행 단계마다 중간 산출물에 대한 지속적인 피드백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음.

1-3

연구관리

1-3-1. 연구과제 선정·수행 및 협동연구 추진의 적정성

□ 연구과제 선정·수행의 적정성

〈장 점〉

- 기본/일반연구과제 발굴 및 선정과정에서 국정지표에 적합한 분야의 과제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연구제안서 평가를 계량평가와 정성평가의 2단계를 걸쳐 진행함으로써 선정과정의 엄격성을 꾀함.
- 연구분야별 전략과제 기획을 강화하여 국정과제 연계성 및 정책수요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임.
- 선정된 수시과제의 특성에 따라 정책적 과제, 전략적 과제, 기초적 과제, 협동적 과제 등으로 유형화하고 이에 따라 과제관리를 적합하게 함.
- 수시과제 전체 수행 건수가 증가하였고 정부부처 의견 반영 과제 수 역시 증가함.
- 수시과제 연구책임자를 직급별로 적절하게 배분함.
- 연구사업 성과의 정책적 활용을 위한 조직, 제도 및 시스템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단 점〉

- 과제제안평가위원회와 연구자문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관·학 전문가 외에도 산업계와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 각층의 다양한 참여가 필요함.
- 수시연구과제 중 내부제안과제가 많으며, 수시과제 심의위원회는 내부위원으로만

구성됨.

- 수시과제의 연구수행 및 평가 등에 있어서 해당 정부부처 담당자의 참여가 미비함.
- 연구사업계획 변경건수가 36개임. 연구중단방지를 위한 노력이나 연구사업계획변경방지를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고의적 사업계획변경 및 과제 중단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한 기술이 미약함.

〈개선 및 건의사항〉

- 현재 선정된 수시연구과제의 특성에 따라 유형화하고 있는 사후적인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수시과제의 유형을 정책연구과제, 단기현안과제, 이슈대응과제 등으로 구분한 후, 정부부처의 요청 외에, 내부 및 외부 전문가, 시민단체,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략적으로 수시과제를 수행할 것을 권고함.
- 연구과제 발굴 및 선정을 위한 각종 위원회의 외부위원의 참여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함.
- 연구과제 발굴 및 선정 관련하여 상향식(Bottom-up) 방식과 하향식(Top-down) 방식을 적절하게 병행하는 체계(two-track system) 도입을 권고함.
- 연구성과 관리체계를 기본연구/일반연구와 수시연구에 대해 차별화하고, 관리체계를 가능하면 연구수행 관리, 연구수행 평가, 연구성과 관리 등으로 범주화한 후 각각의 특성에 맞는 관리체계의 구축을 권고함.
- 연구성과의 품질관리 차원에서 외부기관(KSA/ISO 등)으로부터의 인증 획득을 권고함.
- 객관적 타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유사/중복 연구과제 해소를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함.
- 연구사업의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자들의 연구사업 중단 및 변경 등을 방지하기 위한 부연구책임제 도입 등 연구원의 ‘연구사업규정’에 이를 명시화하고 과제변경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산·학·연 협동연구 추진체계 및 실적의 우수성

〈장 점〉

- 전년도 대비 수시연구과제에서 협동연구의 비율은 54.2%에서 83.6%로 증가함.
- 전문가 포럼 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정책협의 및 분야별 전문인력풀의 활용 등 협동연구 발굴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함.
- 국내외 다양한 연구기관과 협동연구를 통해 글로벌 연구역량과 연구 네트워크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함.
- 기본연구, 일반연구, 수시연구 등 과제유형별 협동연구 수행비율은 고르게 평균

80% 수준을 넘어서고 있음.

〈단 점〉

- 협동연구 활성화 추진을 위한 내부규정은 연구회의 협동연구사업 운영규정 외에 구체적인 협동연구의 특성을 반영한 규정은 따로 없음.
- 협동연구과제의 주관기관에 비해 협력기관으로서 기관 참여 형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음. 산학연 협동연구 관련 규정들에서 수탁협동과제, 위탁협동과제, 연구회수탁협동과제, 기타협동과제로 구분하여 주관과 협력을 구분하고 있으나, 주관 120과제에 비해 협력연구는 7개 과제로 적음.
- 기후변화 홍수재해 대응을 위한 복원력 제고방안 연구의 경우 1년에 1회씩 연구진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중간과정에서의 교류는 연구자의 자발적, 개인적 접촉에 의존하는 것으로 판단됨.
- 해외 협동연구사업 수행 시 긴밀한 협의 및 협조체계 구축이 미약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유사중복 연구과제 해소 노력 가운데 원내 타연구와의 중복성을 해소하는 데서 더 나아가 원외 타 연구기관 및 연구자와의 협동연구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협동연구 관련 규정들 중 협동연구의 개념에 맞게 발굴, 선정, 수행, 활용평가 등의 규정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 기관차원에서 협동연구 활성화와 성과 제고를 위한 노력이 요구됨.
- 수시연구과제의 협동연구가 단순 컨소시엄이나 위탁사업이 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협동연구과제 추진 시 협력기관으로서의 참여 비중을 높일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됨.
- 협동연구 추진 시 원내 참여자의 담당 및 역할을 강화하여 원내외 참여자의 균형 있는 연구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함.
- 순수한 의미의 협동연구라면 직접적인 원고 작성 유무와 상관없이 최종보고서에 모든 원내외 참여연구진의 이름 모두가 병기되는 것이 바람직함.
- 선별된 3개 과제 중 2건은 다년도 과제임. 다년도 과제일 경우 전체 계획과 연계된 현재 연구 단계에서의 상호협력과 기대효과 및 과제가 완료되었을 때의 (다년도)협동연구를 통한 시너지는 무엇인지에 대한 기술이 필요함.

1-3-2. 성과확산 체계의 적정성

□ 연구성과 관리·확산체계 및 실적

〈장 점〉

- 전사적 지식자산 서비스 고도화가 이루어졌고 미국 구글의 학술정보검색서비스 및 Open DOAR서비스에 등록하는 등 국제 3대 오픈 리포지터리(Open Repository) 디렉토리 사이트에 등록이 이루어지는 등 지식정보통합관리의 고도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전문도서관 분야 OAK(Open Access Korea; 한국형 오픈 액세스) 보급대상기관에 선정되어, 세계 약 2,800개 기관의 OAK 리포지터리들과 연계하여 성과물의 해외확산 노력을 2015년부터 지속해왔으며, 2016년에는 google scholar에 등록함.
- 연구결과 확산 체계가 잘 수립되어 있고 환류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음.

〈단 점〉

- 연간홍보계획은 있으나, 중장기적인 연구성과 확산 전략이 없음.
- 성과 확산 타겟 고객별 맞춤형 정보 제공 노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함.
- 국외로의 연구성과 확산 제고 노력이 미흡하고, 해외언론이나 출판매체를 통한 연구성과 확산실적이 저조함.
- 국민이나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성과 확산이 다양화되고 구체화된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지역사회에 부합되는 방식을 고려하여 보다 효과적인 확산수단을 모색하기보다는 일반적인 확산방법에 의존함.
- 연구원 1인당 학술지 논문게재 실적이 0.38로, 기관의 명성이나 연구실적에 비해 논문게재 실적이 매우 저조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식자산의 중요성이나 필요성, 활용방안에 대한 교육 및 학습확대가 필요함.
- 지식 및 정보관리시스템의 주요성과를 객관적, 구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객관적 성과지표를 설정·제시하고 평가하는 평가시스템 구축 필요함.
- 연구성과 확산 수단별 타겟 대상의 설정을 구체화하고 효과성에 해당 성과분석의 구체적인 사례를 분석하여 환류시스템의 고도화가 필요함.
- 국민을 보다 세분화, 구체화하여 타겟그룹별로 효과적인 연구성과 확산수단 고도화가 필요함.

-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실적을 연구기관의 명성이나 연구실적에 부합되도록 개선하는 노력 필요함. 이를 위해 연구실적의 학술지 게재를 독려하기 위한 제도마련과 조직문화 개선이 필요함.

□ 정부3.0 추진 성과 정도

<장 점>

- 정부3.0에 대한 이해도 증진을 위하여 대외협력팀을 주관부서로 지정하였고 교육을 2회 실시, 총 참석자는 278명으로 전년도의 52명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음.
- 정부3.0 교육 실적이나 기관장이 중심이 된 정부3.0 확산 실적을 보이고 있음.

<단 점>

- 정부3.0 추진을 위한 중장기 또는 연간 계획이 미흡하고, 정부3.0 우수사례 벤치마킹이 부족함.
- 부동산 소비심리 지수 이외 공공데이터 제공 대국민 접점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부족함(기관업무의 특성으로 이해).
- 정부3.0 과제를 성공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관을 벤치마킹하여 이를 연구원에 도입·적용·확산한 실적이 미흡함.
- 일하는 방식의 개선과 관련하여 의사결정시스템, 연구수행 방식, 공동연구나 업무수행 방식, 조직문화 등에 대한 개선실적은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정부3.0 과제를 성공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관을 벤치마킹하여 이를 연구원에 도입·적용·확산할 필요가 있음.
- 정부3.0 추진 체계 및 성과관리를 담당하는 강화된 조직역량을 활용하여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연구원의 의사결정시스템, 연구수행 방식, 공동연구나 업무수행 방식, 조직문화와 관련하여 개방, 소통, 협업시스템 구축과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1-3-3. 연구역량의 국제화 정도

□ 연구역량의 국제화 정도와 성과

<장 점>

- ‘국제 교류·개발협력 활성화를 통한 연구역량 국제화 제고’를 목표로 4대 실천전략 및 단계별(연도별) 세부과제를 수립하였고, 글로벌 협력개발센터에서 총괄함(15명 인원 투입).
- 외국수탁연구는 5건으로 최근 3년간의 평균 실적 2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였고, 국제협력사업 고도화를 위한 후속사업 연계모델을 개발하여, 공동연구사업을 발굴하고 전략적인 국제협력사업을 기획함.
- 교육·연수사업 → 네트워크 구축(MOU 체결 또는 공동 워크숍 개최) → 컨설팅사업(또는 공동연구사업) 수행의 단계별 연계사업을 통한 연계사업 추진이 돋보임(40억 정도의 프로젝트로 발전).
- 자문위원회(외부 4인) 및 성과평가위원회(내·외부 5인)를 구성하여 연간사업계획(2016년, 2017년) 검토 및 업무성과평가를 위한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이를 반영하여 국제화 성과 제고에 노력함.

<단 점>

- ‘국토연구원 연구역량 국제화 전략(2015~2018)’에서 연도별 세부추진과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정량적 성과지표는 미흡함.
- 국제연구기관으로부터의 인력교류가 2건이고, 모두 일본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국제회의, 세미나 개최실적이 29건으로 전년도의 32건에 비해 감소함.
- 해외전문가 초청기간이 다소 짧아 실질적인 공동연구 가능성이 퇴색됨.

<개선 및 건의사항>

- ‘국토연구원 연구역량 국제화전략(2015~2018)’에서 연도별 세부추진과제와 관련하여 성과지표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국제연구기관으로부터의 인력교류를 좀 더 확대하고 인력교류를 일본이외로 다변화할 필요가 있음.
- 연구역량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환류체계를 좀 더 구체화하고 반영실적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해외전문가 초청기간을 좀 더 늘려 실질적인 공동연구가 가능하도록 운영방식 개선이 필요함.

II

경영 분야

2-1 리더십 및 책임경영

2-1-1. 리더십

□ 기관의 현안문제 타개와 대내·외적 소통 능력

<장 점>

- 본 기관의 위상에 기반을 두어 미래지향적 시각에서 선도적 연구를 위한 기관장의 목표 및 과제 설정의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됨.
- 신규 MOU 체결, 개도국 정책 컨설팅, 국제 공동연구, 국제 세미나 개최 등 기관 차원에서의 글로벌 활동이 증가하였음.
- 기관장은 기관발전을 위한 현안문제 타개를 위해 연구원 설립 목적과 기능·역할, 경영여건을 분석하고, 내·외부 자문 및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하여 체계적으로 현안과제를 도출하였음.
- 선도적 연구 수행 및 정책 현안대응 강화, 세종시 신청사 건립 및 직원의 세종시 이전 지원, 경영 선진화 및 조직역량 증진 등의 3가지 현안과제를 타개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임.
- 현안문제 타개를 위한 노력과 성과로 청사준공을 완료하고, 지방이전 관련 현안들에 대하여 전 직원과 공유 및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하고, 유관 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공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예산절감 실적이 있음.
- 다섯 가지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궁극적으로 기관의 연구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기관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기관장의 노력이 적극적임.
- 사회적 이슈를 선도하는 미래지향적 과제 발굴을 위해 정부정책 대응성을 강화하여, 수시과제의 상시 발굴 및 수행체계를 강화하고, 특히 사회적 이슈인 인구 감소, 저성장, 제4차 산업혁명, 빅데이터, 공유경제 등 주제와 연관한 미래 전략과제 발굴노력과 성과가 있음.
- 유관기관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정부부처 수요에 대한 수시대응, 포럼 및 전문가 특

강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과제발굴이 이루어짐.

-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다양한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 감사원, 지역발전위원회, 서울시 등으로 다변화함.
- 글로벌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역량 국제화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전략과 단계별 세부과제 설정 등 체계적인 접근을 하고 있음.
-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해 기관장은 내부구성원과의 소통전략으로 소통체계를 다변화하고 상시적 소통체계를 구축하여 합리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
- 국가정책 참여 및 지원을 위한 기관장의 대외적인 활동으로 정부 등 관련기관의 각종 정책 관련 회의에 참석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하였음.

〈단 점〉

- 현안과제들의 문제가 구체적이지 않고, 기관의 일상적인 운영과 관련한 과제로도 전적인 목표설정이 이루어지지 않음.
- 현안과제로 인해 기관의 실질적인 현안문제를 해결하였는지 불분명함.
- 우수한 연구인력의 채용과 아울러 연구자들의 개인적인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음.
- 미래지향적인 과제발굴 및 수행과 글로벌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의 실질적인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불명확함.

〈개선 및 건의사항〉

- 현안과제는 기관의 다양한 현안문제들 중 전략적이고 집중적인 노력의 우선순위가 있는 문제의 설정과 달성목표를 설정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현안문제 해결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기관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하여 우수한 인력의 채용과 아울러 연구자들의 개인적인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으로 투입요소 외에 실질적인 성과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관련 기사뿐만 아니라 기관장이 직접 언론을 대상으로 기관발전과 홍보를 위한 대외활동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윤리경영

〈장 점〉

- 기관경영의 청렴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내부 규정 및 제도로 ‘인사 및 복무규정’,

‘직원의 대외활동 요령’,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등 반부패청렴 규정, ‘회계규정’, ‘계약사무운영 규정’, ‘법인카드관리 규정’ 등 예산 및 회계 관련 규정, 그 외 감사규정 등을 운영하고 있음.

- 법무·감사활동 워크숍 등 기관경영의 청렴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프로그램 운영으로 구성원의 투명한 업무 수행 및 청렴한 마인드 고취를 위해 노력함.
- 기관의 청렴경영을 위한 노력 결과 채용 및 승진 관련 위반 사례, 법인카드 부정사용 사례 등이 발견되지 않음.
- 기관경영의 청렴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정부패 척결 노력 및 성과로 청사건립과정에서 우수업체를 대상으로 한 가격견적, 입찰을 통해 23억의 예산을 절감하였음.
- 2016년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평가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않음.
- 연구윤리 준수를 위한 내·외부의 입체적인 관리 및 연구윤리 사전 사후 체계적인 점검체계를 갖추고 있음.
- 표절검색시스템 정착 및 성과물 제출 시 연구윤리 자가점검표 제출, 원외 공동연구자 연구윤리 준수 동의서 청구 등 자가점검체계를 강화함.
- 보고서 최종 마무리 단계에서 외부 전문 리뷰어에 검토 의뢰, 원내 ‘보고서 윤리점검TF’ 구성·운영 등 체계적인 노력이 이루어짐.
- 연구윤리 확보 및 준수를 위한 신입직원 교육(2회), 외부 전문가 초청 연구윤리 교육(2회), 연구윤리 시스템 교육(4회) 등 반복적인 교육을 실시함.

〈단 점〉

- 정보 및 경영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위하여 위원회 등의 경영 결정에 대한 내용을 즉각적으로 구성원들과 공유하는 제도가 부재함.
- 기관 규모와 역사 그리고 우수인력 확보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하는 기관장의 취지를 고려할 때, 무기계약직 전환 등의 공정한 관리를 위한 인적자원 고용 안정 측면의 노력이 미흡하다고 평가됨.
-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자체 경영윤리교육의 비중이 낮음.
- 감사원 감사결과(감사보고서-주요 취약분야 공직비리 집중감찰(2017. 4. 6.)), 일부 직원의 ‘외부활동 신고업무 태만 및 연구비 편취’ 등과 관련된 사항이 지적됨.

〈개선 및 건의사항〉

- 윤리경영을 위한 규정뿐만 아니라 경영윤리교육을 통해 청렴 및 투명경영을 위한 모니터링과 사전예방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현행 연구윤리 준수를 위한 입체적인 노력과 전 직원 대상 교육을 통한 사전예방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문책)의 성실한 이행과 외부활동 신고 및 결과 보고, 연구비 및 연구관리, 직원의 윤리의식 및 윤리행동 강화를 위한 교육적·제도적 장치 강화가 요구됨.

2-1-2. 책임경영

□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적정성 및 성과목표 달성도

〈장 점〉

- 경영목표와 연차별 실천계획의 연계성이 우수함. 특히, 구성원이 참여하는 보도자료 콘테스트를 시행하여 구성원들의 사회이슈 대응능력을 강화한 점이 우수함.
- 도시재생, 방재, 공간인프라, 스마트도시 등 아젠다 위주의 센터 구성 및 센터장 중심의 정기회의, 과제 수행 등 체계화 마련 및 센터 간 협력활동을 수행하고, 정부와 센터별 정책실무협의회 개최를 강화하면서 부처와의 전문적인 협력을 추구한 점이 우수함.
- 시민참여 연구를 시범적으로 수행하여 지역 상황에 맞는 현안에 대한 연구를 시도한 점이 우수함.
- 연구교류협약 체결기관과의 교류 성과를 점검한 후 이에 기초하여 국토연구원과 대상기관의 수요 맞춤형 중심으로 MOU를 신규로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전략적 협력운용계획이 우수함.
- 국제연수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교육·연수평가, 성과평가 위원회 등을 통하여 강의의 질적수준과 구성을 관리한 점이 우수함.

〈단 점〉

- 선제적 정책대응을 경영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데 비해 실천계획은 이미 제기된 정책연구 수요를 반영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괴리가 있다고 판단됨.
- 기관 당면 현안 도출과정이 불명확하여 당면 현안에 대한 대응수단의 실현가능성 및 현안과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어려움.
- 성과목표의 계량화를 거의 고려하지 않은 점과 ‘계량화’가 부적합한 경우 질적 성과를 반영하는 성과지표를 설정하지 않은 점 등이 미흡함.
- 기관 홈페이지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실시하였으나, 실적보고서에 제시된 ‘연구보고서 활용 및 배포 만족도 조사(10월)’에 대한 수행내역이 없는 점이 미흡함.

- 아이디어를 얻기 위한 차원이기는 하나 외부 인문학 및 문화 분야와의 연계(특강 등)가 일회적이고 단편적인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제 연구에 있어서는 인문학적 및 사회과학적 요소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출 필요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국토개발과 연관된 갈등에 대한 연구,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연구 등 중요한 사회적 쟁점과 직결된 연구가 더 있어야 할 것임. 현재 스마트도시 등 제4차 산업혁명과 연관된 것 외에 특별히 선제적인 연구는 잘 보이지 않음.
- 타 국책연구기관도 국토 관련 연구를 하고 있는 것처럼 연구여건이 과거와 상당히 달라졌으므로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과 같은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 연계를 추구하는 등 추후 융복합 연구 및 새로운 연구이슈 발굴 등에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국토연구가 환경, 교통 건설경제, 수자원, GIS 도시혁신, 도시계획 등 매우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주도적으로 이러한 다양한 연구주제를 제시하고 이끌어가는 선도적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기관장의 관심 제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멕시코, 파라과이 등 국가와의 지식공유를 통하여 우리나라 국토정책에 대한 시사점이 도출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도출된 시사점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후속 노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실적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당면 현안도출 과정이 체계적으로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가능한 경우 성과목표지표를 계량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지표의 성격상 계량화가 부적절한 경우 질적성과(Outcome)를 반영하도록 지표설정에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실적으로 제시하는 경우 실제로 수행하였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 각 실천계획별 목표달성 실적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고, 구체적인 연구 실적은 각 실천계획별로 과제 수와 과제명 등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책임경영 이행 정도

〈장 점〉

- 해외 공동연구, MOU 체결, 해외 네트워크 구축 등의 사업이 양적으로 우수함. 개도국 등 해외에서 한국의 국토개발 경험을 배우려는 수요에 부응하는 실적이 우수함.
- 국제공동연구를 선·후진국 대상으로 다양하게 실시하였고, 국제세미나, 공동워크숍 등을 통한 연구결과의 국제적 확산을 위해 노력한 점이 우수함.

- 연구회와의 협력으로 ‘코스타리카 지식 다이얼로그 구축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한 점이 우수함.
- 연구회 협동연구 사업계획에 적절히 대응한 점이 우수함.
- 조직의 유연성과 관련하여 세분화된 팀들을 통합·운영 할 수 있도록 총무, 재무, 예산상 협력을 수행하고 있음.
- 생생토크 등 직원들과의 소통구조를 마련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다양한 이슈들을 발굴하여 일부 반영하고 있음.
- 연구역량 국제화 제고 전략을 수립하여 MOU 체결, 국제공동연구 등을 수행한 점이 우수함.

〈단 점〉

- 해당사항 없음.

〈개선 및 건의사항〉

- 국토종합계획 마련에서부터 수많은 연구과제와 기본계획 등에 있어 연구기관 내부 이외에 유관연구기관 및 관련단체, 학계, 정부 등과의 전방위적, 예방적 협력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갈등적 요소가 많고 융복합 여지가 많은 분야의 연구임을 항상 염두에 두고 실질적 방안 마련 및 융복합 주류화가 필요함.
- 국제기구와의 공동 연구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연수성과에 대하여 평가를 한 후 이를 연수프로그램 개선에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2-1-3. 자율지표

□ 기관장 중점 추진과제①

〈장 점〉

- ‘국토정책 연구 국제화 선도연구기관’ 비전과 ‘국제교류·개발협력 활성화를 통한 연구역량 국제화 제고’의 연구역량 국제화 전략 수립으로 국토개발 국제 공동연구 및 글로벌 개발협력을 위한 목표와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한 점은 긍정적임.
- 자문위원회 및 성과평가위원회 등 내·외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 계획, 성과 환류 체계 구축 등 국제교류·개발협력 활성화를 위한 수행과정이 적정함.
- 중점협력기관과의 교육 및 연수, 컨설팅, 협의회, 보고서 발간 등 균형적이고 효율적인 국제 협력사업을 수행한 노력과 실적이 인정됨.

- 주요 협력기관과 후속사업 연계 모델을 개발하여 중장기적 성과를 도모하고 사업 효과를 강화하고자 한 노력이 긍정적임.

〈단 점〉

- 기관이 제시한 국토개발 국제 공동연구 및 글로벌 개발협력 내실화 과제를 위한 평가내용, 기준, 자료 사이의 일체성이 부족함.
- 멀티미디어 등을 활용한 한국의 국토개발 경험과 성과의 공유·확산 매체의 다양화가 필요함.
- 글로벌 개발협력 실적 성과의 정량적 평가를 위하여 전년도 성과 제시를 통한 비교가 필요함.

〈개선 및 건의사항〉

- 4개 실천전략에 따른 연도별 세부 과제 실천전략 등의 정성적 평가 지표 수립 외에, 각 지표를 객관적으로 평가 가능한 정량적 목표 또는 비교를 위한 전년도 지표의 제시가 필요함.
- 한국의 국토개발 경험과 성과의 공유 및 확산을 위해 멀티미디어 등 홍보매체의 다양화가 필요함.

□ 기관장 중점 추진과제②

〈장 점〉

- 중점 추진과제로 설정된 ‘국가 스마트도시 정책 지원 기능 강화’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스마트시티 정책 지원, 국내·외 교류 및 협력,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스마트 도시 지원 강화 등 다양한 전략을 활용하여 과제를 수행하고자 한 노력이 긍정적으로 판단됨.
- 환류활동을 통하여 수행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역량강화를 위한 GDPC 전문가 특강(11회), Ecole Brown Bag 미팅(8회) 등을 개최하여, 해외 우수연구 성과 공유와 센터 구성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수행한 실적이 인정됨.
- 스마트도시 관련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시, 카이스트 등의 국내 기관 및 UN Habitat, IDB, WB 등의 해외 유관기관들과의 협력 강화는 긍정적임.
- 구체적인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 지원을 위하여 세종시 녹색건축공모전을 지원하고 독립형 마이크로 스마트 그리드와 연계된 에너지플랜트 공급 계획을 지원한 실적이 인정됨.
- 국내 스마트도시 성숙화와 해외 진출 관련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연구방향 및 기관 역할에 따른 체계적 연구수행 방안을 마련한 노력이

긍정적임.

〈단 점〉

- 사업 협력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기관과의 국제협력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나, 중장기적 협력 강화를 위한 성과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 지자체 관계자가 주축이 되는 컨퍼런스 등의 다양한 지자체가 함께 수행할 수 있는 지원은 다소 부족함.
- 다른 국가 대비 한국 스마트도시의 강점을 부각하는 구체적 전략 마인드가 부족함.

〈개선 및 건의사항〉

- 대표 실적들이 2016년도 하반기에 이루어져 있으므로, 체계적 계획 수립을 통한 꾸준한 과제 수행이 필요함.
- 실적보고서 작성 시 평가기준 및 전년도 성과를 정량·정성적으로 요약·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 협력 및 세미나 외에 스마트도시 관련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해외 유관기관들과의 상시적인 교류협력 활동의 다양화가 필요함.
- 각 지자체별 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지원에 있어서, 도시별 특성을 감안한 구체적 전략이 필요함.

2-2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2-2-1.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의 효율성

□ 효율적 조직운영 및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과 성과

〈장 점〉

- 연구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구조직 활성화 및 맞춤형 융복합 TF를 운영하였으며, 이러한 조직 운영 노력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냄.
- 비정규직 행정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임금피크제 정착 노력, 노사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 외부 고객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운영하는 등 주요 성과를 만들어냄.
- 내부 고객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내부소통체계 다변화를 시도하고 특화된 소통전략

을 수립하려고 노력함.

- 기관의 연구 및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영목표, 성과목표, 추진내용(성과 지표)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수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중장기 인력운용계획을 통해 인력구조의 변화를 파악하고 연도별 인력운영계획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인력관리 노력을 기울임.
- KRIHS 스타연구원 도입 및 저성과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시행 등 체계적인 인력관리 제도 마련 및 운영을 통해 조직역량을 강화함.
- 공간·시간의 제약에 따라 직접 참석이 어려운 응시자의 경우 화상 면접을 실시함으로써 우수인재 채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임.
- 경영목표, 연구수요, 인력구조 등을 감안하여 미래 10년간 중장기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함.
- 기관의 인력수급 및 관리체계를 위해 중장기 인적자원 관리시스템을 수립하여 운영함.

〈단 점〉

- 연구 및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파악이 구체적이지 않아, 내·외부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운영 노력과 성과간의 연계성이 미흡함.
- 내부 고객요구에 부응한 제도개선 및 운영실적과 관련하여 기관만의 차별화된 제도 개선 실적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기관차원에서 조직운영의 성과를 측정하는 전사적 노력이 부족함.
- 중점추진과제 및 세부추진전략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체계적인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이 부족함.
- 조직운영 노력 및 실적이 추상적이어서 성과가 명백히 부각되지 못함.
- 경영목표, 성과목표 등을 계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가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음.
- 지역인재 채용과 관련하여 정규직원은 주로 수도권 및 해외대학에 편중되어 있어 수도권 외 지역소재 우수 인재 발굴 및 채용 실적(1명)은 다소 저조함.
- 수도권 외 지역기관과의 인력교류 실적이 주로 '14년~'15년에 체결된 것으로, 향후 지속적인 인력교류를 위한 '16년 운영 실적은 미흡함.
- 중장기 인력수급 계획이 중장기 재무예산과 연계성이 부족함.
- 2016년도 타기관간 인력교류 실적이 미흡하고 차별적이지 못함.
- 채용의 객관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부위원의 참여비율이 다소 낮음(10명 중 2명).

〈개선 및 건의사항〉

- 연구 및 경영환경 변화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러한 연구환경 변화

와 연계하여 경영목표를 수립하고 단위 조직·기능별 세부 실행계획과 주요 성과 등을 명확하게 제시할 것을 권고함.

- 경영목표와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정량화된 성과지표(조직분야 핵심 KPI 개발)를 설정하고, 이와 관련된 주요 성과를 제시할 것을 권고함.
- 수도권 외 지역소재 대학에 채용공고문을 배포·게재 협조 요청하는 것 외에 다양한 리크루팅 채널을 만들어 수도권 이외 지역 소재의 우수인재를 발굴하고 채용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권고함.
- 중장기 인력수급계획은 중장기 재무예산 계획 등과 보다 긴밀하고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수립할 것을 건의함.
- 채용의 객관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부위원의 참여비율을 확대할 것을 권고함.
- 이직률이 낮은 편이지만, 우수인력 유지에 보다 높은 관심과 제도화가 필요함.

□ 조직 구성원의 역량 및 인사관리 적정성

〈장 점〉

- 중장기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세부 추진과제를 도출하여 중점적으로 실행하려 노력함.
- 인재상 및 핵심역량을 설정하고 경력단계별 맞춤형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수립된 것은 체계적인 교육훈련 시스템 구축에 노력함.
- 우수보고서(연구자) 홈페이지 게재·홍보를 통해 구성원 사기진작을 위해 합리적으로 노력함.
- 기관 구성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함.
- 연구직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교육 연수를 지속적으로 실행함.
- 교육훈련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부서별 교육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적극적으로 교육만족도 조사를 실시함.
- 2015년 대비 교육시간 및 교육인원이 크게 증가하고 1인당 교육훈련비가 상대적으로 높음.
- 경영목표와 핵심역량을 연계하여 교육훈련을 운영하려는 역량분석 보고서의 노력이 돋보임.
- 시차출퇴근제 도입을 위해 노·사간 4차례 협의 후 합의를 통해 '16년 1월 시차출퇴근형 유연근무제를 추가로 도입·시행하여 직원의 선택의 폭을 넓혔음.
- 연구연가 제도를 규정하여 연구연가 대상자 선발기준에 근속연수와 근무성적평정요건을 포함시켜 운영의 적정성을 위해 노력함.
- 연구직 및 비연구직 업무성과 평가 계량화 비율이 70%로 평가지표의 계량화 비율

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있음.

- 업적평가등급을 7등급으로 차등화하고 등급별 배분율을 적용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업정성을 확보함.
- MBO에 의한 성과지표 달성평가, 다면평가 등은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노력함.
- 비연구직의 계량평가 비중(70%)이 상대적으로 높아 평가의 객관성을 높임.
- 구성원의 업적평가시스템 구축에서 연구직과 행정직에 따른 차별화된 평가지표를 설정하여 운영함.
- 연구위원 이상 직무역량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다면평가를 실행함.
- 위촉직원의 근무성적 평가결과에 대한 피드백 체계를 개선함으로써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함.
- 평가시스템 시행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다면 및 다단계 평정 조정절차를 운영함.
- 승진심사기준에 근속연수뿐만 아니라 근무성적에 대한 최소요건을 규정하여 승진심사의 엄밀성을 제고시키려고 노력함.
- 업적평가에서 연구직은 연구성과평가위원회, 행정직은 정량평가위원회로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있음.

<단 점>

- 중장기 교육훈련계획과 연계한 교육체계 및 맞춤형 역량강화 프로그램 구성의 체계성이 미흡함.
- 교육 추진방향은 직책별/경력단계/업무성과 등에 따른 차별화/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이지만, 실제 운영은 제도화된 정형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수준에 그침.
- 핵심역량 및 인재상과 연계된 체계적인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기획되지 못함.
- 단순한 원장 간담회 및 문화·체육행사를 넘어 복지, 급여, 근무여건, 인센티브, 교육 등 다양한 사기진작제도의 이행이 부족함.
- 행정직 교육연수 프로그램 운영 지침을 마련하였으나 2016년 적용 사례가 없음.
- 핵심역량과 관련하여 일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나(예; 건설정책 기본이해, 교통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오픈소스 GIS 기초교육 등), 소수 인원(1-3명)만 참여하였음.
- 연구 및 행정인력 간 균형 있는 교육기회 제공을 추진과제로 하였으나, '15년 대비 '16년 교육훈련비 집행 내역과 관련하여 큰 개선이 보이지 않음('16년 총 교육훈련비 연구직(97.6%) vs 비연구직(2.4%)).
- 실행된 구성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핵심역량과 체계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아 프로그램 이행 실적의 적절성이 부족함.

- 기관의 관점에서 업무향상도 등과 같은 교육의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수단/절차가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실제로 시행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인재상 및 핵심역량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지 않아 교육훈련 집행의 적절성이 미흡함.
- 교육만족도 조사에서 만족도 비율이 전년도에 비하여 오히려 낮게 나타남.
- 유연근무제 운영에 따른 근태불량자에 대한 제재 및 사후조치가 명확하지 않음.
- 안식년(연구연가) 자격요건에서 근속연수 뿐만 아니라 업무실적평가의 일정수준을 최소요건으로 규정하지 못해 대상자 설정의 적절성이 부족함.
- 안식년제 시행 후 결과보고서에 대한 심사평가나 연구결과의 학술지 게재 제도 등 안식년제 사후 관리가 부족함.
- 역량평가의 경우 직급과 직책에 따라 평가요소를 차별화 운영하고 있는 것에 반해, 업무성과평가(계량화)의 경우 직급과 직책 특성을 반영한 평가 요소 차별화 운영은 미흡함.
- 연구직의 연구과제 평가를 위해 연구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심의회 구성(예; 외부 전문가 참여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는 미흡함.
- 직종별 세부평가 요소가 적절한 비중에 따라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못함.
-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적을 업적평가에 연계하는 차별화된 평가요소 개발과 실행이 부족함.
- 업적평가 시스템 개선을 위해 관련된 위원회나 TF가 적절히 구축되지 못함.
- 연구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에서 외부인의 참여 규정이 없음.

〈개선 및 건의사항〉

- 중장기 교육훈련계획과 연계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교육체계를 설계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할 것을 권고함.
- 기관의 인재상을 바탕으로 도출한 핵심역량과 업적평가를 위한 기초/리더역량 등과 연계하여 교육훈련체계를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역량기반의 교육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권고함.
- 교육만족도 조사를 통한 개선 필요사항을 강사에게 인지하도록 하여 교육효과 개선을 유도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교육프로그램 기획과 설계에도 반영할 것을 권고함.
- 교육훈련 결과보고서를 DB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교육연수 후 전체 대상 세미나 또는 전과교육 실시 등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환류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것을 권고함.
- 연구직과 비연구직의 교육훈련비 구성을 적절히 맞추기 위해 직종별 교육훈련비 개선이 필요함.

- 교육만족도 조사에서 만족도 비율이 전년도에 비하여 오히려 낮은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할 것을 권고함.
- 현재 스마트워크와 시차출퇴근제 외에 추가적인 유연근무제(예; 시간선택제, 근무시간 선택형)를 도입하여 운영할 것을 권고함.
- 시차출퇴근형 근무제의 적극적인 홍보와 분위기 조성을 통해 이용률을 제고할 것을 건의함.
- 안식년(연구연가)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실적평가의 일정수준을 최소요건으로 규정하고 결과보고서 평가 및 연구결과물 학술지 게재 제도 확대 추진을 통해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을 건의함.
- 유연근무제의 정착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태관리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할 것을 권고함.
- 비연구직의 업무성과평가와 관련하여 부서 업무성과(30%)를 개인 성과평가에 반영하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부서 성과지표를 바탕으로 개인별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부서 성과지표와 개인별 업무 성과지표를 연계하여 정의하고 실제 개인의 업무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시스템 개선을 권고함.
- 업적평가 시스템의 평가지표 선정의 합리성과 평가프로세스 진행의 절차 공정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이의신청 건수('16년 11건 접수/6건 수용)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기를 건의함.
- 교육훈련 실적을 업적평가에 연계하는 평가요소의 개발 및 실행을 건의함.
- 종합근무성적 평정등급 산출시 직급 별로 평가군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업적 평가시스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연구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에서 외부인의 참여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함.

□ 연구기관 보안관리의 적정성

- 전담인력 및 예산 확보, 사이버침해대응 훈련, 전 직원 보안교육·용역사업자 보안관리 등을 수행함.
- 사이버보안에 대한 기관의 관심 제고, 홈페이지 취약점 점검 및 조치와 망 분리 환경 마련이 필요함.

2-2-2. 노사관계 선진화

□ 노사관계 선진화 정도

〈장 점〉

- 노사갈등 현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년 대비 원장-노조 대표 간 의사소통 횟수가 확대되었고, 노무부서장과 지부 사무국장 간의 대화채널이 상설화되었음.
- 그동안 난항을 겪던 노사협의회 구성이 지속적인 설명회와 협의 과정을 거쳐 2016. 12. 6. 완결됨.
- 전년도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수평적 소통채널을 보다 다양화하였음.
- 단체협약서의 효력이 2017. 5. 26까지 유지되어 교섭 갈등은 존재하지 않음.
- 노조전임자 법정 근로면제시간을 준수하였고(제1노조 2,300시간, 제2노조 700시간), 노동조합 지원 내용이 적법함.
- 경영·인사 관련 방만경영 체크리스트에 위반하는 단체협약상의 규정이 없으며, 경영권이나 노조의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노사 간 교섭이 존재하지 않음.
- 퇴직예정자에 대한 금품 과다지급에 해당될 수 있다는 국무조정실의 지적 사항을 받아들여 관련 규정을 개정함.

〈단 점〉

- 노조의 3원화(복수노조)로 인해 노조 상호 간 갈등 발현의 소지가 있음.
- 고충처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그 운영 실적이 미흡하고, 원장 간담회를 통해 접수·처리되는 등 절차상·내용상 개선 여지가 많음.
- 노무관리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이 현저히 부족하고, 교육결과에 대한 환류시스템이 타기관에 비해 체계화되어 있지 않음.
- 의사소통활성화 전략의 내용이 단편적이고 체계화되어 있지 않고, 직급별·부서별 간담회 등 수평적 의사소통 시스템이 위축되어 있음.
-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음에도, 노사 및 노노 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등 갈등소지가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복수노조 체제 하에서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주도적 노력이 요구됨.
- 고충처리절차에 있어 신청인의 익명성과 고충내용의 비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함.

- 노무관리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현안 갈등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기관장의 노력은 크게 개선되었으나, 타기관에 비해 수평적 의사소통채널이 위축되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복수노조체제 하에서 2017. 5. 단체협약의 효력이 종료하므로, 인사경영 및 후생복지 부분의 방만경영 체크리스트 위반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 원만히 단체협약 체결 협상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2-2-3. 복리후생 운용의 합리성

□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실적 정도

〈장 점〉

- 명예퇴직자 퇴직금 지급규정, 유아보육비 지급지침, 의료비지급 관련 노사합의서, 경조사 지급기준 변경(2014. 12. 11. 내부공문) 상 복리후생에 대한 방만경영 체크리스트 위반 사항은 없음.
- 정기감사(2016. 2. 국무조정실 감사)를 통해 복리후생 관련 체크리스트 위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음.
- 휴가·휴직제도, 복무행태, 유가족 특별채용과 관련하여 체크리스트 위반사항이 존재하지 않음.
- 복무·인사 관련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을 잘 준수하고 있음.

〈단 점〉

- 실제 지급사례는 없으나, 인사규정 및 퇴직금 규정 상 파면 및 해임자에 대한 퇴직금 불이익처분 규정을 두지 않음.

〈개선 및 건의사항〉

- 실효성 여부를 떠나, 인사규정에 파면 및 해임자에 대한 퇴직금 불이익처분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 지부협약 상 암 검사비 지원 규정(제13조) 등 해석상 모호성을 남기는 제반 규정을 검토하여 개정 등의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음.
- 보다 조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운영할 필요가 있음.

2-3 보수 및 예산 관리

2-3-1. 예산운용의 적정성

□ 예산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과 적정성

〈장 점〉

- 중점연구과제는 국정과제와의 부합성, 기관 설립목적, 정책사회환경 변화와의 부합성을 검토하여 기본과제 중심으로 선정되고 있음.
- 2016년도 연구사업비 편성내역은 정부제안과제가 68%, 기초연구과제가 14.2%로 기준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편성함. 2017년도 편성계획은 적정하게 편성함. 수시연구사업비는 기관전용사례가 없고, 수시과제 성격에 맞지 않는 성격의 지출 없음. 외부위탁 비율은 10.2%로 적정하게 편성됨.
- 연구개발적립금사업은 이사회 승인내역에 따라 편성됨.
- 예산편성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선정단계에서 관련 위원회를 중심으로 사전에 실효적으로 검토하고, 편성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제고하며, 과제별 예산 모니터링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음. 법인카드 모니터링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경비절감제도를 충실히 적용하고 있음.

〈단 점〉

- 중점과제의 집행과 관련하여 타 사업과 차별화된 추진과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다른 사업에 비해 오히려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2017년도 이후 중점연구과제 중 다년도 연차과제가 부족하여 중장기적인 중점과제의 수립과 예산배정절차가 부족함.
- 2016년도 연구사업비 예산집행률은 총계가 85%, 수시연구과제가 80.3%, 기본과제가 81.5%로 모든 사업들이 대체로 약간 낮은 수준을 달성함. 연구과제의 분기별 예산집행이 4/4분기에 집중됨.
- 연구개발적립금의 예산 대비 집행실적이 85.7%로 기준을 미준수하고 있음. 적립금 사업들의 집행을 편차가 상당히 큰 편임.
- 예산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으로서 기본적인 재정관리시스템 운영 및 사후관리 기능 등으로 2016년도 중에 실시한 특별한 노력 및 성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됨.

〈개선 및 건의사항〉

- 중점연구과제의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해 보다 차별화된 추진과정을 적용하고 중장기적인 다년도 중점과제의 수립을 권고함.
- 차년도 수시과제의 수와 비중을 보다 정확하게 추계할 것을 권고함. 보다 실효적인 연구사업비 예산집행률 관리체계 수립과 집행노력이 요구됨.
- 연구개발 적립금사업들의 집행률 편차를 줄이고, 향후 연구개발적립금사업으로 수행할 과제 및 사업에 대한 사전조사 및 준비를 통하여 사업비 이월을 최소화하는 등 전반적으로 집행률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함.
- 연구원이 자체적으로 개별적인 고유한 상황 및 특성에 따라 예산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할 분야 및 절차 등을 선정하고 적극적으로 이를 추진하여 구체적인 실적 여부를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3-2. 보수체계의 적정성

□ 총인건비 관리의 적정성

〈장 점〉

- 총인건비 규모는 연구회 평가기준을 준수함.
- 결원인건비는 연구회 평가기준에 따라 적절히 계상하였음.

〈단 점〉

- 2015년 대비 2016년도 총 인건비 인상률이 2.405%로 나타나 인건비 인상률 기준 2.25%보다 0.155% 초과하여 기준을 미준수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총인건비 인상률은 인건비 인상률 기준을 준수하는 노력이 요구됨.

□ 결산잉여금 처분 및 퇴직급여충당금 편성·집행의 적정성

〈장 점〉

- 결산잉여금(938백만원)은 ‘2016년도 예산집행지침’과 ‘소관 연구기관 연구개발적립금 관리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분하고, 차기 이월되었음.
- 퇴직급여충당금 편성·집행은 연구회 평가기준을 준수함.

〈단 점〉

- 해당사항 없음.

〈개선 및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성과연봉제 운영의 적정성

〈장 점〉

- 성과연봉이 총 연봉의 29.2%로 적정하게 설계되어 있으며, 근속연수와 연동된 자동 승급등 기본연봉의 자동적인 인상효과를 갖는 수당은 없으며,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는 수당은 성과연봉 전환함.
- 결산잉여금에 의한 능률성과급 기준도 간부, 비간부 모두 2배 이상의 차등지급을 하도록 적정하게 설계되었음.

〈단 점〉

- 기본연봉은 누적식을 미적용하고 있음. 기본연봉의 차등지급률 및 인원배분비율도 기준을 미준수하고 있음.
- 성과연봉의 간부직, 비간부직 차등배분비율은 기준을 미준수하고 있음. 성과연봉 인원배분비율도 총원 기준 및 비간부직 기준을 미준수하고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긴밀한 노사협의를 통해 기본연봉의 누적식 전환과 차등지급률 기준 준수노력이 요구됨.
- 성과연봉과 결산잉여금에 의한 능률성과급의 인원배분비율을 최고-최저등급 10% 이상, 특정등급 50% 미만 그리고 좌우가 대칭을 이루도록 인원배분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 임금피크제 정착노력과 운영 효과

〈장 점〉

- 2015년에 도입된 임금피크제는 적용대상을 전 직원으로 하고 있음. 임금조정기간은 정년직전 2년이며, 제도적용 1차년도에 총연봉의 90%, 2차년도에 80%의 지급률로 설계되어 있음.

- 2016년도에 발생한 1명의 별도정원에 맞추어 신규채용을 달성하여 기준을 충족하였음. 신규채용자에 대한 채용조달은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임금절감분, 퇴직자와 신규채용자의 임금차액을 활용하도록 설계하여 기획재정부의 권고안을 준수하고 있음.

〈단 점〉

- 해당사항 없음.

〈개선 및 건의〉

- 2016년 임금피크 대상자에 대한 특별한 직무의 개발이 없어 임금피크제 시행 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추후 멘토링이나 다른 연구기관들의 사례를 연구하는 등으로 개발이 필요함.
- 향후 채용조달계획은 임금피크 절감액과 인건비 잔액을 활용한다고 하면서 연도별로 구체적인 소요재원의 규모 및 이에 대한 마련방안 등의 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 이를 구체화하여 사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 필요함.

2-4 감사 및 평가결과 개선 정도

2-4-1. 내·외부 감사결과 및 연구기관 평가결과 개선 정도

□ 내·외부 감사결과에 대한 개선 정도

〈장 점〉

- 업무분장규칙에 의거하여 감사업무를 규정하고 감사 전담인력 2명을 배치하고 있으며, 내부감사규정에 의거 감사와 원장이 협의하여 인사이동 및 근무평정을 하며 불리한 신분상 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 확인됨.
- 일반경비 집행 및 법인카드 사용 안내(보고서 형태) 자료를 작성하여 구성원들에게 교육을 시행한 점이 인정됨.

〈단 점〉

- 국무조정실에서 지적한 평가등급 부여 및 연봉제 이행의 부적정에 대해서 노동조합과의 추가 논의를 사유로 아직까지 개선완료하지 않았음.

〈개선 및 건의사항〉

- 국무조정실 지적사항 관련하여, 조직 내부 사정으로 다소 힘들더라도 장기적 플랜을 마련하여 조속히 이행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2016년 하반기 비상임감사의 갑작스런 지병 및 유고라는 특수한 상황은 이해되나, 2016년 상반기 등 전년도 전체적으로 비상임감사의 활동 실적을 확인하기 어려움. 또한, 좀 더 사전에 비상임감사의 지속적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하고 조속히 대처하는 노력이 부족한 측면이 있음. 2017년에는 비상임감사 활성화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감사실원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상임감사와 기관장이 협의하여 근무평가를 한다는 규정과 함께, 감사실 직원의 인사(근무평가, 인사이동 등)에서 우대할 수 있는 규정을 보강할 것을 권장함.

□ 연구기관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 정도

〈장 점〉

- OECD 국가들과의 교류 확대를 위한 위원회 참석, MOU 체결 등의 활동이 확인되며, 국제기구와의 공동연구 추진(IDB, WB) 성과가 확인됨.
-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생생토크 등)를 통한 직원 고충처리 노력이 인정되며, 노사협의회를 추진한 실적이 확인됨.
- 업무효율성 강화 및 업무협업구조 강화를 위해 조직개편 및 성과지표를 개선한 실적이 인정됨.
- 융복합 네트워크를 운영한 실적(87건)이 인정되며, 협동연구 비율(90% 이상)이 높게 유지되고 있으며, 정책기여도가 높은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노력하는 등 다학제 융복합 연구를 위한 활동들이 인정됨.
- 기관장의 영향력 있는 언론 매체 기고 활동 및 인터뷰 등의 실적이 전년도 대비 증가하였음.

〈단 점〉

- 연구성과물이 정부 정책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기여(공헌)를 하는가를 보다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있는 성과지표와 고민하여 설정하고, 기관의 정책기여도 성과를 명확히 제시하는 노력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정책연구네트워크 운영 및 산학연 협동연구 추진과 관련한 구체적인 개선활동 및 가시적 실적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국토연구’ 학술지의 논문게재 활성화 실적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판단되며, 국토연구 분야의 가장 전문가인 연구원들의 논문게재를 좀 더 활성화함으로써 ‘국토연구’ 학술지의 위상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직원 평가결과 등급과 성과연봉 등급의 일치, 그리고 성과연계 연봉제 도입은 전년에 이어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의 조속한 실행이 요구됨.
- 장애인 3명 고용, 장애인 우대조치사항의 채용규칙 반영 등 노력이 인정되나, 여전히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정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개선 및 건의사항〉

- ‘경영자문회의’를 통해 현안문제 관련 연구주제를 선정하고는 있으나, 그 구체적인 실적이 명확하지 않음. ‘경영자문회의’를 통해 어떠한 성과가 도출되었는가를 명확히 하는 프로세스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음.
- 기관평가 실적보고서 작성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현재는 매우 간단하게 ‘개선하였음’과 같은 서술식으로 작성되어 있으나, 차년도에는 개선실적(시행시점표시)을 기술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구체적인 활동을 하였고, 그로 인해 어떠한 실적(성과물)을 얻었는가를 명확히 기술할 것을 권고함.

2-5 **사회적 배려**

2-5-1. 정부권장정책 이행 정도

□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정도

〈장 점〉

- 장애인 고용률은 2013년(1.4%), 2014년(1.9%), 2015년(2.3%), 2016년(2.4%)로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사와 업무협약(2회)을 통해 장애인 추천을 의뢰하는 등 장애인 고용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음. 공단 추천을 통해 장애인 청년인턴 3명(중증1명, 경증2명)을 채용한 실적 있음.
- 장애인 채용을 위해 직원채용규칙(12.31) 및 위촉직 운용지침(2.23)을 각각 개정하여 장애인 채용 시 우대조치 특례조항을 신설하였음.

- 장애인기업 물품 구입은 외부구매총액의 6.48%로 2015년의 0.36%에 비해 크게 상승하여 장애인 연계고용제도 활용 실적이 크게 증가하였음. 이는 신청사 건축에 따라 장애인기업을 통한 공사실적 증가에 기인한 것임.

〈단 점〉

- 장애인 의무고용율은 2.4%로 2015년 대비 0.1%p 증가하였으나 장애인 의무고용률 3.0%에 미치지 못하며 6개월만 의무고용률을 준수함.
- 전 직원 대상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장애인 적합 직무의 발굴 및 지속적인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별도의 노력은 부족한 편임.
- 장애인기업 물품구매가 장애인기업을 통한 공사 실적이 대부분으로 장애인 연계고용제도 활용실적이 제한적인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중장기 연차 장애인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연간 10개월 이상 3.0%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장애인 채용 노력을 기울일 필요 있음.
- 장애인의 고용의 질(정규직 채용)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장애인 채용 추천 의뢰 시, 인사 및 홍보, 전산 등의 업무를 제시하고 있으나 채용에 한계가 있으므로 장애인 적합 직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채용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 연계고용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MRO 제품 등을 포함하여 장애인기업제품의 물품 구입 실적을 실질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청년인턴 채용 이행 정도

〈장 점〉

- 청년인턴 채용계획 9명 대비 19명(연구직 6명, 행정직 13명)을 채용하여 목표를 초과달성함(달성률 211.1%).
- 청년인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청년인턴제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관리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으며, 근태관리가 적절함.
- 청년인턴 재직 시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업무 및 진로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도멘토와 감성멘토를 활용한 멘토링 제도가 우수함.
- 근무평정이 우수한 청년인턴에 대해서는 해당 내용을 표기하여 증명서를 발급함.
- 위촉직 채용 시 청년인턴에 대해 3%의 가점을 부여하는 등(서류전형) 인턴의 내부 채용 시 우대조치가 마련되어 있음. 이러한 우대조치에 따라 청년인턴 4명을 위촉

직 연구원으로 채용한 실적 있음.

〈단 점〉

- 청년인턴 운영을 5개월 단위로 운영하고 있어 청년인턴의 안정성 및 연속성이 미흡함.
- 인턴 퇴직자 발생 시, 1개월 이내 보충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못함.
- 지도멘토, 감성멘토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성공사례가 제시되지 않고 있음.
- 청년인턴에 대한 맞춤형 교육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나 국토연구원에 특화된 프로그램보다 기초적이고 일반화된 교육(경제 교과목 수강 및 IT 자격 관련 및 전 직원 대상 법정 의무교육)에 집중되어 있음.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일부 기간 중에는 인턴 퇴직자 발생 시, 1개월 이내에 결원 보충이 이루어지지 못 하였으므로 향후에는 1개월 이내의 신속한 충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 필요함.
- 국토연구원에 특화된 청년인턴 운영계획이 필요함. 맞춤형 직무교육 교재 개발, 멘 토교육 강화 등이 필요하며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의 교육비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취업지원 프로그램도 청년인턴의 취업역량 강화 및 희망직종 탐색기회의 제공과 직 접적으로 연관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률 준수 정도

〈장 점〉

- 경기남부보훈지청과의 업무협약(2회)을 통해 보훈특별고용을 추진하였고, 2016년 국 가유공자 2명을 신규 채용한 실적(위촉직 사무원)이 있음.
- 직원 채용 규칙(12.31) 및 위촉직 운영지침(2.23)을 개정하여 국가유공자 공개채용 시, 5~10% 가점을 부여하는 우대규정을 명시 또는 신설하였음.

〈단 점〉

- 기관 총원 285명 대비 15명의 국가유공자를 고용하여 고용률 5.6%로 전년 대비 동 일한 수준이나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률 6%에는 미달함.
- 국가유공자 고용률이 2014년(6.0%), 2015년(5.4%), 2016년(5.3%)로 지속적으로 하락함.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채용 시 우대조치 특례조항이 연말(12.31)에 마련되는 등 사 회적 배려자 채용에 대한 기관의 관심과 노력이 소극적임.

〈개선 및 건의사항〉

- 국가유공자 고용유지 및 신규채용 등 적극적인 노력을 통하여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률 6%를 준수하여야 함.
- 중장기 연차 국가유공자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유관기관과의 보다 긴밀한 협조 등을 통해 국가유공자에게 적합한 직무를 발굴하고 추가 채용함으로써 정부권장기준을 충족하도록 노력해야 함.
- 국가유공자 고용의 질(정규직 채용)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휴가장려 및 일·가정 양립지원정책 운영의 적정성

〈장 점〉

- 휴가장려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휴가사용촉진 관련 규정(복무규정 제20조의 2)을 정하여 실시하고 있음.
- 기간 중 총2회(7월, 10월)에 걸쳐 휴가사용을 권장하고 그 절차를 안내하였음. 이러한 노력의 결과, 휴가소진율 100%라는 매우 우수한 실적을 달성하였음.
- 출산전후 휴가제도(복무규정 제26조), 배우자 출산휴가제도(복무규정 제25조), 육아휴직제(인사관리규정 제27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복무규정 제27조의2) 등을 통하여 해당 제도들을 명문화하고 있음. 그 결과, 출산휴가(7명), 배우자 출산휴가(5명), 육아휴직제(5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사용자 없음,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로 활용)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실적 있음.
- 배우자에 대한 5일의 유급 휴가와 난산으로 인한 휴가제도가 신설되는 등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노력이 우수함.
- 태아검진시간 청구(복무규정 제26조 제3항), 가족돌봄 휴직(인사관리규정 제27조 10호), 여성보건휴가(복무규정 제26조 제3항), 임신근로자 단축근무(복무규정 제26조3) 등의 제도를 명문화하고 재해구호휴가 및 난산으로 인한 휴가의 신설, 공무상 질병 휴직, 육아휴직, 가족돌봄 휴직기간을 연장 개정하였음. 그 결과, 태아 검진시간 청구(8명), 가족돌봄 휴직(신청자 없음), 여성보건휴가(1명), 임신근로자 단축근무(11명)를 활용한 실적 있음.

〈단 점〉

- 해당사항 없음.

〈개선 및 건의사항〉

- 육아휴직 기간을 남녀 모두 3년으로 확대 실시할 것인지 고려할 필요 있음.

-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정책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운영되고 있으므로 가족친화 경영 인증 신청을 권유함.

□ 비정규직 차별 해소 및 전환 정도

<장 점>

- 위촉직 운용지침을 개정(2.23)하여 비정규직의 차별 해소 관련 조항들을 명문화하고 정규직과 동일하게 처우할 것을 기술하고 있음.
- 연구직과 행정직 구분 조항 및 고용연장 조건에서 근무성적 제한점수 조항을 삭제(위촉직 운용지침 제7조 제1항, 2.23)하고 비정규직 채용 과정에서의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조항(위촉직 운용지침 제5조의 4, 8.1.)을 신설함.
- 위촉직 운영방안 개선안에 대한 설명회 개최(10.13) 및 세종시 이전에 따른 위촉직원 근무여건 개선방안 시행 확정(12.26)을 통해 비정규직의 차별해소를 위해 노력함.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교육과 능률성과급, 복리후생적 현물, 금품 및 편의시설, 휴가 등에서 정규직과 동일한 처우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2016년 기획재정부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 3명 대비 4명(1명은 기관자체 계획 인원)을 전환하여 전환계획 대비 133.3%의 목표를 달성함.

<단 점>

- 비정규직 비율이 전체의 약 40%로 높은 편임.
-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에 차별이 존재함. 박사급 연구직(69%)과 석사급 연구직(75%)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수준 차이 큰 편임. 연구직뿐 아니라 비연구직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차이가 존재함. 전체적으로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이 정규직의 70~85% 수준으로 임금수준 격차가 있음.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2년간 매년 5%씩 추가 임금인상을 예정하고 있으나, 비정규직 처우 개선 목표가 정규직의 85% 수준으로 설정되어 여전히 격차가 존재함.

<개선 및 건의사항>

- 비정규직간의 임금수준이 정규직의 70~85% 수준으로 그 차이가 큰 편이며 타 기관에 비해서도 차별 정도가 높은 편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2년간 매년 5%씩 추가 임금인상을 시행하더라도 여전히 격차가 존재하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함.
- 비정규직 비율을 단계적으로 줄이기 위해 수립된 중장기 인력계획이 비정규직에 대한 가시적인 고용안정 결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함.